

**[사]한국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안)**

2021. 7. 8.

문화체육관광부

☐☐ 목 차 ☐☐

I. ABC부수의 정책적 활용현황 등 검토배경 ...	1
II. 사무검사 주요 결과	3
III.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5
IV.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	7
[붙임1] 정부광고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	10
[붙임2] 조치권고 사항별 점검 결과	11

I. ABC부수의 정책적 활용현황 등 검토배경

□ (ABC부수의 정책적 활용) 신문·잡지 등의 부수공사를 수행하는 ABC협회는 민법상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발행·유료부수 등 ABC부수공사결과가 정부광고** 등에 정책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협회 회원사가 대폭 증가하고 기능이 활성화

*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예산회계 및 편성·결산에 대해 주무부처, 국회 등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놓임 (사단법인/ABC협회 해당) 불가피한 경우 검사 및 감독만 가능

** '20년 정부광고 총액 1조 893억원(신문 등 인쇄매체 2,452억원), 정부광고주 3,058개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	
정부광고법 및 시행령	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잡지는 정부광고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 부수자료 요청 대신 ABC활용 가능 *정부광고법 시행 전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부터 ABC 활용('09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집행규정	ABC부수공사 결과를 확인하고 정부광고 시행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발기금 지원대상이 되려면 ABC협회 가입 의무
공적자금 지원	안정적 운영 위해 기금('95년, 80억) 지원
보조금 지원 기준	언론재단 우송지원(16억), 소외계층 구독료지원(18억) 등 언론재단 보조사업 집행 기준

한국ABC협회
회원사 증대,
협회 기능
활성화의
바탕이 됨
(*'09년~현재)*

* ABC협회 '89년 설립, 회원사 77개사, '08년 회원사 287개사 → '09년, 정부광고 훈령에 "ABC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잡지에 정부광고 우선배정" 규정 신설, '10년 회원사 731개사, '11년 1,096개사로 대폭 증가 → '18.12월 정부광고법 시행 (시행령에 ABC포함), '19년 회원사 1,648개사로 지속 증가 → '21.3월, 회원사 1,591개사

○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부수공사 과정이 투명하게 운용되었어야 하나, 운영상 내부 갈등과 신뢰성 문제제기 지속

* 협회 내부관계자, 문체부에 부수공사 과정 조사 요구 진정서 제출('20.11.9)

□ (사무검사) 문체부는 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를 발표('21.3.16.)하며, 권고사항 불이행시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기 통보

※ 한국ABC협회 사무검사 개요

- (근거법령) 소관 법인에 대한 검사·감독권(민법 제37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 (조사내용) 부수공사 관련 진정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법인사무 전반
- (조사인력) 미디어정책과 담당자, 언론·미디어 분야 전문가 등 5명
- (추진경과) ①자료제출 요청('20.11.24) → ②서면자료분석('20.12.4.~12.31.) → ③현장점검('21.1.29.~2.5.) 및 내용분석(~'21.3월) → 결과발표('21.3.16.)
- (후속조치) ABC부수공사 과정 전반의 불투명한 운영과 협회 내부 거버넌스의 한계를 확인, 제도개선 조치 권고(이행 시한 : ~6.30.)

○ 문체부의 사무검사와 언론·국회의 ABC부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 새 신문지의 폐지 수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등, ABC협회는 부수공사의 신뢰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

* MBC 뉴스·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동남아 K-신문 열풍의 비밀"/'21.5.9.) 등에서 부수 부풀리기 문제 지적

※ (참고) MBC 스트레이트 보도 주요내용

- (K-신문 수출) 필리핀·태국·파키스탄 등 동남아에 파일·채소·길거리음식 포장지로 '새 한국 신문지' 대량 수출('21.1~2월, 2만 9천톤 수출)
* 수출 신문지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재수출(중국제지업자 펄프 원료로 사용)
- (신문 지국) 신문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 발행부수는 줄지 않고 지국별 할당량 유지. 신문지를 판매*한 폐지 수입으로 지국 운영
* 지국장 인터뷰 : 60%는 배달, 40%는 폐지 처분
- (ABC협회) 독자관리프로그램에서 중지 독자를 유료 독자로 되살리거나, 여러 지국 운영시 한 지국으로 독자를 몰아주는 등 방식으로 부수 부풀리기 의혹

□ (미디어 현실과 괴리) 한편, 종이신문 구독률은 급격히 감소, PC·모바일을 활용하여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한국 미디어 소비 환경 변화

* 종이신문 정기구독률(언론재단) : '00년 59.8%→'08년 36.8%→'10년 29%→'20년 6.3%
* 인터넷(모바일+PC) 뉴스 이용률(언론재단) : '11년 57% → '20년 78.7%

○ "부수"를 정부광고 집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에 따라 부수 부풀리기 등 정확한 부수 산정이 어렵도록 하는 구조적 유인 존재

* 구독률 대폭 감소하였으나 ABC 유료부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11년 유료 789만부 → '20년 유료 695만부), 독자에게 배달되지 않은 새 신문지가 폐지로 처리되는 문제

II. 사무검사 주요 결과 (2021.3.16. 발표 요약)

□ 불투명하고 부실한 부수공사 과정 전면 개선 권고

- (문제점) 신문사의 부수보고 -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보정 및 인증위원회 등 **부수공사 과정 전반의 불투명성 확인**
 - 일부 신문사는 부수보고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이메일 별도 신고**
 - 표본지국 선정·공사원 배치를 **참관인 없이 특정관리자 1인이 단독 수행**
 - 표본지국 선정결과를 **신문사에 7일전 사전통보** 후 공사원에 최종결과 통지
 - 신문사 직원이 지국에 방문·대기한 상태로 공사 진행, **증빙자료 미보관**
 - 협회 **유가율·성실률**과 문체부 확인내용 간 **상당한 차이 발생**
- * (협회 성실률 vs. 문체부 조사 성실률) A신문사 98.09% ↔ 55.36%, B신문사 94.68% ↔ 50.07%, C신문사 82.92% ↔ 62.73%
- 인증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

< 조치 권고사항 (5건) >

연번	권고 사항	주요 내용
1	신문사 부수보고 방식 개선	○ 신문부수 보고요령 개정 ○ 모든 신문사 '부수보고관리시스템' 활용 조치 ○ 데이터 입력 및 열람 등에 대한 기록 확인 조치
2	표본지국 선정방식 개선	○ 표본지국 선정 가이드라인 설정 ○ 제3자 참관, 선정 과정 기록·공개 등
3	공사원 배치방식 개선 및 역량 강화	○ 무작위 배치, 순번 등 배치기준 설정 ○ 공사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4	지국 실사방식 개선	○ 공동 조사단 참여 및 현장 실사 등 추가 조사 추진 협조 ○ 지국 실사 통보 시점 조정(1~3일 전) ○ 각종 증빙 확보 의무화 ○ 신문사 직원의 개입 가능성 차단 ○ 지국 공사방식의 근본적 개선 검토
5	보정자료 인정의 합리화 및 인증위원회 내실화	○ 보정자료 인정기준 마련 및 인정 근거, 검토과정 등에 대한 기록 작성·보관 ○ 인증위원회의 실질적 검증기구 역할 수행 방안 마련

□ 협회의 거버넌스 개선 권고

- (문제점) 신문사 중심 임원구성과 회비수입 등으로 **매체사 영향력 과도 작용**, 이사회 양대 구성원인 신문업계와 광고업계 간 불신 지속 등
- 협회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갈등 지속과 부수공사 제도의 신뢰성 상실 등 **회장(금년 정기총회일 임기 만료 예정)으로서의 부적절한 협회 운영** 경고

< 조치 권고사항 (2건) >

연번	권고 사항	주요 내용
6	신임 회장 선출	○ 공정한 선출 절차 조속 진행
7	이사회 구조 개선	○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제3자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 통합ABC 제도 운영 권고

- (문제점) 신문 구독률('20년 6.3%) 등 **매체 환경 변화 반영 필요**
- * 종이신문 정기구독률(언론재단) : '00년 59.8% → '08년 36.8% → '10년 29% → '20년 6.3%

< 조치 권고사항 (1건) >

연번	권고 사항	주요 내용
8	통합ABC제도 운영	○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ABC제도 도입

☞ (이행시한) ▲ 권고사항은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
▲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하되, **2021년 6월 30일까지 조치**토록 집행 계획을 세우고 조치한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

*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적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 (참고) 한국ABC협회 운영 ABC제도는 「정부광고법」 및 시행령에 의거, 정부광고 집행에 활용되는 만큼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권고사항이 이행되어야 하며, **권고사항 불이행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Ⅲ.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 제도개선 전반 관련

- (결과) 문체부는 부수공사 과정 전면 개선, 협회 거버넌스 개선 등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 관련, 이행 수시 점검·독려

* 이행현황 점검내역 : 문체부, 이행현황 제출요청(1차/4.20, 2차/5.14, 3차/5.21 등)
→ ABC협회, 이행현황 제출(1차/4.23, 2차/5.17, 3차/5.31, 최종/6.30)

- (결과)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8건, 세부과제 17건)에 대해, ABC협회의 불이행 10건,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종합적으로 불이행 판단**

- 권고사항은 2개월 안에 즉시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6월 말까지 조치 후 “조치한 결과”를 문체부에 제출했어야 하나, 이행 결과물 미진

※ 점검결과 주요내용 (항목별 점검결과는 불임2(p.11) 참조)

주요 권고	권고 내용	이행 점검 결과(6.30)
표본지국 선정, 공사업 배치방식 개선	○제3차 참관, 선정 과정 기록·공개 등 ○공사업 무작위 배치, 배치기준 설정	○'21년 하반기(제3차 참관/공사업 무작위 배치)부터 시행예정 → 현재시점 불이행
지국 실사방식 개선	○공동 조사단 참여 및 현장 실사 등 추가 조사 추진 협조 ○지국 실사 통보 시점 조정(7일 → 1~3일 전), 각종 증빙 확보 의무화 ○신문사 직원의 개입 가능성 차단 ○지국 공사방식의 근본적 개선 검토	○협회, 회원사 비협조로 불이행 * 세부내용 p.6 참조 ○'22년 상반기부터 제한적·단계적 시행계획으로, 매체사·지국 등 협조 필요 답변 → 현재시점 불이행, 구체적 협의사례 없음
신임 회장 선출, 이사회 구조 개선	○공정한 선출 절차 조속 진행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제3자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7월 이후 이사회 개최 예정 답변 ○이사회에 제3차 참여가 옳은지는 협회 답변사항이 아니라는 입장 → 이행의지 확인 불가로 불이행 판단

- ▲'조치완료/수용'으로 보고했으나 세부내용은 개선 없이 기존 현황만 기술, ▲이행시기를 '21년 하반기/'22년 이후로 “계획”하여 실제 실행여부 미정, ▲신문사·지국이나 협회원(매체사·광고주)의 협조·설득이 필요하다고 언급만 할 뿐 구체적인 협의 노력 실적 부재 등,

- 표면적인 이행 약속과는 달리, 협회 본연의 업무인 부수공사 제도를 정상화 하기 위한 구체적·적극적인 이행 노력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

* 5.17. ABC협회는 77쪽(본문 기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이행계획은 6쪽에 불과

- ☞ 특히, ABC부수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핵심적인 조치권고사항인 지국실사방식 개선, 이사회 등 거버넌스 개선 권고 불이행

□ 공동조사단 추가조사 관련

- (결과) 사무검사보다 표본을 확대하여(12개→50개 지국) 실제 유가율·성실률을 도출하고 이를 ABC협회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조사단 구성* 및 지국 방문 등에 있어 ABC협회 및 회원사의 비협조로 추가조사 불가능

* 당초계획(안) : 문체부·ABC협회·전문가·유관기관으로 공동조사단 구성

- ①(조사단 구성 비협조) ABC협회는 공사를 조사단에 적극 참여시켜 ABC 부수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문체부에 공사업 선정 역할을 전가하고 협회 공사업의 조사단 참여에 비협조

* 문체부는 협회에서 공동조사 참여 공사를 내부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내부 확정·회신하지 않을 경우 사무검사 조치권고에 대한 이행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협회 거부

→ (4.18.) 협회 공사업 참여가 결렬될 상황이 되자, ABC협회는 “협회가 진행중인 종편·케이블 참여 매체사 상반기 부수공사에”(=권고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기존 ABC부수공사 방식), “문체부 등이 병행조사할 경우” 소공사업에게 조사참여를 지시하겠다고 주장

* (6.30.) 협회는 최종보고에서 하반기 부수공사에 매체사별 표집·공사업 배정·지국 실사 등 모든 절차를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i)협회 비협조로 추가조사시 진행되지 못했던 사안을 다시금 제안한 것 ii)협회가 추가조사에 협조할 수 있었음에도 비협조한 것을 오히려 방증

☞ 처음부터 소공사업을 참여(출장명령 등)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추가조사 진행에 비협조, 추가조사 일정 지연 → 협회 공사업을 제외하고 추가조사 진행

- ②(대상지국 방문 비협조) ABC협회는 그간 지국 실사를 통해 부수를 인증 해왔으나*, 매체사 사전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지국에 대한 권한 없음을 주장

→ 문체부에서 방문 대상 지국 및 해당 지국에서 취급하는 모든 매체사에 공지를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20개 지국 방문시 지국장 부재중(16곳), 자료확인 불가(20곳)

* 사무검사의 A~C신문사의 경우 총 유료부수의 최소 89% 이상이 지국의 유료부수('19년)

* 지국장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등을 사유로 전산자료 제공은 거부

☞ 협회가 기존 부수공사 방식이 아닌 통합지국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수공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지국 유료 독자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자료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비협조한 것은, 그간 ABC협회 부수공사 과정상 불투명성과 부실이 있었음을 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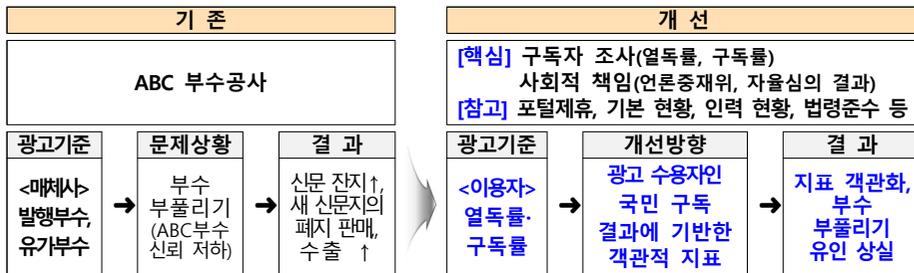
- ☞ 4.19~5.7, 전국 20개 지국을 방문하였으나 동일한 상황 반복되어 추가조사 사실상 불가능, 핵심적 조치권고인 “추가조사 조치 불이행” 판단

IV.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 계획

- ※ (검토결과) 문체부는 '21.3.16. 사무검사 결과 발표 이후 ABC협회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이행을 독려해 왔으나, ABC협회의 표면적인 협조 약속과는 달리, 후속조치 권고에 대해 실질적인 이행의지가 없고 ABC부수공사에 대한 신뢰성 회복조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
- 추가조사 불응, 핵심적 권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사무검사 권고 불이행으로 최종 판단,
 - ABC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 정부광고제도 개편 등 추가조치 추진(21.7월~)
- * 민간 광고시장의 자체적인 활용 여부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정부광고에서 그간 ABC부수를 정책적 활용했던 것을 중단

1 기본방향: 향후 정부광고는 “국민 구독자 조사 결과에 따라” 집행

- (개편배경) ① 추가조사 불응, 제도개선 권고 미이행 등 신뢰 상실, ② 부수 중심의 지표 활용으로 새 신문지 수출 등 폐지문제 발생
☞ 정부광고제도 매체선정 기준의 획기적인 개편 필요
 - (개편내용) 그간 인쇄매체* 정부광고 우선집행의 기준(참고자료)으로 활용되었던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 중단 및 정부광고제도 참고지표 개편, 보조금 지원기준에서 ABC 제외, 공적자금 회수 등 추진
- * 방송(시청률), 라디오(청취율), 사이트·앱(트래픽) 등 타 매체는 기존 참고자료 유지
- (대안) 신문사 대상으로 조사하는 '부수' 대신,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열독률·구독률) 구독자 조사'로 대체, 광고집행 참고지표의 신뢰성 확보
☞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를 병행 활용



2 정부광고제도 세부 개편 계획(안)

- ① (정책적 활용 중단) 정부광고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규정 개정*으로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 중단(~21.下)
 - * 'ABC부수공사'·'ABC협회 가입'이 명시된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5조(자료요청), 언론재단 정부광고 업무규정 제6조(자료확인) 및 지역신문법 제16조①제3호에서 ABC규정 삭제
 - ** 지자체 조례에서도 ABC가입 여부나 부수를 명시한 사례가 있어(16개), 정책적 활용 중단 안내
- ② (정부광고 개선) 인쇄매체 정부광고 집행 시 (기존)ABC부수→(변경)매체 영향력,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하여 복수기관에서 검토한 복수지표를 참고하도록 정부광고법 등 개정(~22.上)
 - * 언론재단은 새로운 복수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해당 매체의 영향력·공공성을 파악 → 광고 효과와 광고 환경(각 신문의 제시단가, 광고수급 상황 시기, 광고주의 예산규모, 지면 위치, 광고량 등에 따라 개별 광고의 단가를 매체사와의 협상에 의해 최종 결정

- (기본방향) ① 기존 '발행·유료부수' 활용시의 '부수경쟁'→부수 부풀리기 →잔지 과다발생·판매 및 수출'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② 매체의 영향력,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복수지표 발굴
- (핵심지표) <전국일간지·주간지> ① 열독률·구독률 등 구독자 조사, ② 언론중재위·자율심의 결과 등 사회적 책임 등

지표	주체	설명
구독자 조사	언론재단	전국 5만명 대상(대면조사/서울 및 전국 16개 지자체 포함), 매체사별 열독률(지난 1주간 열람한 신문·구독률(정기구독) 등 조사 *언론수용자조사(5천명 대면조사): 열독률(10.2%), 구독률(6.3%)
사회적 책임	중재위, 윤위 등	언론중재위 직권조정(정보도) 건수, 자율심의(신문윤리위원회/광고자율심의기구) 참여 여부 및 결과(주의, 경고 등)

<지역신문> 상기 두 가지 지표와 함께, 지방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여부 활용

지표	주체	설명
우선 대상사	지방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21년 77개), 공모사업 선정사 여부

- (참고지표) 포털 제휴여부, 기본 현황(정상발행 여부), 인력 현황(편집·취재직 및 이외 인력), 관련법령 위반여부(법령위반 및 제세납부) 등

③ (보조금 등 기준 개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중인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 사업 참가 요건 등에서 'ABC부수' 기준 폐지

- 신문 우수비 지원사업(16억),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18억) 등 언론재단 보조금 지원기준에서 ABC유료부수 제외
- 언론인교육 사업 참가 자격(ABC부수인증 참여사 소속), 공모 심사 가점(ABC부수공사 참여사) 등에서 ABC부수 제외

④ (공적자금 회수) 공적자금(45억원) 환수 조치('21.7월~)

- (자금 현황) ABC제도 운영 기금 80억원 출연('95년,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 전경련 30억), '21년 잔여자금 약 45억 원

<p>※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 기금조성)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 위한 기금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출연금액: 총 80억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 전경련 30억) ▪ ('07년 문체부 감사) 투자손실(12억), 운영적자 총당(29억) 등 부실한 기금 운영으로 기금 원금 39억원으로 확인 ▪ ('08년~) 기금운용계획 승인시 조건(기금잔액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운용, 기금운용수익금 기금으로 적립 등) 부과로 기금 원금 사용 통제 ▪ ('17년~) 기금 수익금까지 동결, '21년 기준 잔액 약 45억 원

- (계획) ABC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된 공적자금인 만큼, 정책적 활용 중단에 따라 ABC협회에 지원된 자금 잔액 회수 추진(방통위 협의)

③ 향후계획

- (법령 개정) ①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내용의 정부광고법 시행령 개정(~'21.10월), ②정부광고제도의 개편을 위한 정부광고법,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 추진(~'21.12월)
 - * (~'21.12월) 현행처럼 '19년 ABC부수공사 결과('20년 발표) 참고
- (기금 환수) 문체부→방통위 환수 협조 요청('21.7월~)
- (언론재단) 보조사업 선정기준 개편, 구독자 조사 추진(~'21.12월)
 - * ('22년~) 구독자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광고 집행 추진
- (유관기관) 주요 정부광고주(중앙부처·지자체)에 공문 안내('21.7월~)

붙임1

정부광고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

○ (정책적 활용 중단) 정부광고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ABC활용 중단

	현행	개정(안)	추진시기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5조(자료 요청) 문체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신문 및 잡지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 요청 대신 에이비시인 한국에이비시협회가 실시하는 신문·잡지의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자료 요청) 문체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신문 및 잡지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 요청 대신 부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즉시 추진 (~'21.10월)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언론재단 규정	제6조(자료 확인) 영 제5조에 따라 재단은 신문 및 잡지 광고를 의뢰받을 경우 한국ABC협회의 ABC부수공사 결과를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확인) 영 제5조에 따라 재단은 신문 및 잡지 광고를 의뢰 받을 경우 부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 2022년 1월 1일~	즉시 추진 (이사회 개최) (~'21.8월)
지역신문법	제 16조 ①문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제 16조 ①문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1.12월

* 지자체 조례에서도 ABC협회의 발행·유가부수나 ABC협회 가입 여부로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적 활용 중단 예정임을 지자체에 안내

□ **조치권고 사항별 이행여부 점검 결과**

○ 세부과제(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

연번	권고 사항	주요 내용	이행여부
1	신문사 부수보고 방식 개선	○신문부수 보고요령 개정	△
2		○모든 신문사가 ‘부수보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조치	△
3		○데이터 입력 및 열람 등에 대한 기록 확인 조치	○
4	표본지국 선정방식 개선	○표본지국 선정 가이드라인 설정	×
5		○제3자 참관, 선정 과정 기록·공개 등	△
6	공무원 배치방식 개선 및 역량강화	○무작위 배치, 순번 등 배치기준 설정	△
7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8	지국 실사방식 개선	○공동 조사단 참여 및 현장 실사 등 추가 조사 추진 협조	×
9		○지국 실사 통보 시점 조정(1~3일 전)	×
10		○각종 증빙 확보 의무화	×
11		○신문사 직원의 개입 가능성 차단	×
12		○지국 공사방식의 근본적 개선 검토	×
13	보정자료 인정의 합리화 및 인증 위원회 내실화	○보정자료 인정기준 마련 및 인정 근거, 검토과정 등에 대한 기록 작성·보관	△
14		○인증위원회의 실질적 검증기구 역할 수행 방안 마련	×
15	신임 회장 선출	○공정한 선출 절차 조속 진행	×
16	이사회 구조 개선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제3자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
17	통합ABC제도 운영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ABC제도 도입	×